‘청렴’ 다짐하더니… 소방 워크숍서 ‘화투 도박’ 의혹

소방청, 사행행위 대상 소방관 6명 사실관계 조사
광산 소방관 사망사건 징계 간부 2명 포함돼 파장

청렴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소방본부 공식 워크숍에서 일부 소방관들이 돈을 걸고 화투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특히 의혹 대상자 6명 가운데 지난해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발생한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간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전남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월 26일부터 이틀간 전남 영광에서 열린 ‘2026년 THE 청렴한 워크숍’에서 사행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석자 6명을 조사하고 있다.

청렴 업무 교육과 소방 감찰 현안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된 공식 행사에는 본부와 일선 소방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일부 참석자들이 워크숍 기간 별도의 공간에서 이른바 ‘찔러’로 불리는 화투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찔러’는 화투패를 이용해 돈을 걸고 승패에 따라 금전이 오가는 방식의 사행행위로 알려졌다.

실제 금전이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물론 사행행위와 관련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의혹 대상자 가운데 광산소방서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간부 2명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사해 회식·음주 강요와 남성 상급자 옆자리 착석 강요, 사적 심부름 등 직장 내 갑질 의혹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했다. 유가족의 감찰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과 피해자의 심리상담 자료가 부적절하게 취급·노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소방청 본청과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고, 전남광주소방본부는 관련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2명은 파면, 12명은 중징계, 3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징계를 받은 간부들이 ‘청렴’을 주제로 한 공식 행사에서 사행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직 기강과 조직문화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번 사안을 자체 조사하지 않고 소방청에 넘겼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소방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26억원대 사기·자금 횡령 50대 업체 대표 ‘징역 4년’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뒤,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받아 빼돌리고 스크랩(잔여물)을 임의로 처분해 총 26억원 상당을 편취·횡령한 50대 제조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 대표 A씨(54)에게 징역 4년을 판결했다.

A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알루미늄 가공 업체 B사를 운영하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원자재인 알루미늄 빌렛과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반제품을 공급받아 가공 및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다.

그러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B사의 법인 자금 약 55억68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다가 20억~30억원 상당을 탕진했다. 이로 인해 B사의 채무가 13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

하지만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C사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빌렛 45만kg(시가 약 16억3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을 편취했다.

또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C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ESS 반제품 27만5000여kg(시가 약 9억6300만원 상당)을 매각·처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영진 기자 looks@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2026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20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광주시장에서 동부소방서와 의용소방대원들이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38억 사기 40대 ‘징역 8년’

장기수선충당금 등 빼돌려…지인들 투자·취업 미끼 범행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6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지인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44차례에 걸쳐 6억626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인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사 계약을 내세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등 14차례에 걸쳐 3억758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한국전력공사 고위직인 친척을 통해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45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아파트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2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전기요금 결제 명목으로 5억600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가공의 카드깡 업자를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억4599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냉방기기 사용 급증…전남광주 곳곳 화재

최근 3년간 광주 화재 53건…7~9월에 ‘71%’
전남서도 42건…“멀티탭 문어발 사용 피해야”

폭염 속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남·광주 곳곳에서 관련 화재와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냉방기기 화재 상당수가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나 무더위가 이어지는 시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남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냉방기기 관련 화재는 모두 53건이다.

화재 원인별로는 과부하와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31건(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적 요인 11건(20%), 부주의 7건(14%), 원인 미상 4건(8%) 순이었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체 화재의 71%인 38건이 집중됐다. 이 기간 발생한 화재의 주요 원인 역시 전기적 요인이 66%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도 냉방기기 관련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2023년 13건의 냉방기기 화재가 발생해 1억547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024년에는 18건이 발생해 1명이 다치고 1961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11건이 발생해 9507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올해도 냉방기기 사용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화재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로 20일 오전 10시28분 광양시 중동의 한 아파트 내부 거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명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9일 오전 7시47분 광주특별시 서구 금호동의 한 노래방에서도 멀티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다행히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길이 확산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7일 오후 4시 17분에는 여수시 중앙동 한 수산업체 냉각기 실외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인근 건물 등이 소훼됐다.

소방당국은 냉방기기 자체의 결함뿐 아니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품을 하나의 멀티탭에 연결하는 잘못된 사용 습관이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장시간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냉방기기의 전원과 주변 상태를 확인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